
국민행복과 지역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

2013. 1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차 례>

<요 약>	1
I. 대한민국 지역의 어제와 오늘	11
1.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11
1) 세계속의 대한민국과 대한국민	11
2) 국민행복과 국가통합을 위한 당면과제	13
2. 지역발전의 현주소	14
1)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14
2) 지역 주민의 삶과 일터	16
3) 지역상생발전	17
3. 지역정책의 발자취와 향후 방향	18
1) 참여정부 이전	18
2) 참여정부	19
3) 이명박 정부	19
4) 새로운 지역정책의 추진 방향	20
II. 지역발전의 미래상	25
1.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25
2. 한반도경제권 구축	25
1) 한반도경제권 구축 필요성	25
2) 한반도경제권 구축 방향	26

III. 주요 추진전략	31
1. 지역 일자리 창출	31
1)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31
2) 그동안 지역정책은 일자리보다 산업육성에 치중	32
3)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33
4)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35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9
1) 도시의 중요성과 지방도시의 침체	39
2) 도시정책의 문제점과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필요성	40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41
3. 농어촌 활성화	49
1) 농어촌의 현재와 미래 모습	49
2) 기존 농어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	50
3) 농어촌 활성화 정책의 주요 과제	52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57
1) 지역발전 재정지원의 중요성	57
2)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	58
3)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61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66
1) 지역정책 집행체계의 문제점	66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67
6. 중부·남부경제권 구축	72
1) ‘3+1 한반도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72
2) ‘3+1 한반도경제권’ 구축 방향	73
3) 중부경제권 발전방향 및 구축전략	74
4) 남부경제권 발전방향 및 구축전략	76
5) 제주경제권 발전방향 및 구축전략	78

<요 약>

□ 대한민국 지역의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의 참화를 딛고 1962년 경제개발에 본격 착수한지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2위의 경제강국,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국가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국가발전의 롤모델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에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있음

우리나라가 자타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4대 양극화 문제인 빈부격차, 세대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극복하여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과 기업, 지역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향상되는 것과 비교하여 지역발전, 특히 지방의 현실은 매우 우려스런 상황에 처해 있음.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학교, 훌륭한 문화시설과 의료기관 등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각종 인프라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도시와 농어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 아울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지역간, 부문간에 상생의 시너지가 창출되지 않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새로운 지역정책은 먼 미래가 아닌 오늘을 사는 주민과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함. 특히 지방의 주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 지방의 활력을 살릴 수 있는 중추도시권 육성,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이 핵심이 되어야 함. 아울러

이들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제도와 집행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지역발전의 미래상

지역정책이 지향해야 할 지역발전의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 통합을 선도하는 살기좋은 지역”이 되어야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및 농어촌 활력 강화’, ‘지역간 상생발전’을 설정할 수 있음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3개의 글로벌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국토 구상을 염두에 두고 지역정책을 추진해야 함.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은 세계속의 중부경제권으로, 영남권과 호남권은 동북아속의 남부경제권으로, 북한경제권은 통일 대한민국의 북부경제권으로 각각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중부 및 남부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추진전략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함. 기존에 추진해 왔던 선도산업, 전략산업 등 국가성장에 필요한 신산업 정책은 국가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며, 대신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정책을 추진해야 함.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부처(예: 중소기업청)가 주체가 되어야 함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중심의 지역산업 정책을 기업지원 정책으로 재편해야 함.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애로기술 개발, 경영, 마케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도시지역에 아파트형 임대공장 공급을 확대하여 여성 및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과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고용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함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학융합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중소기업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 고교를 육성하고, 마이스터 대학 지정, 공과대학의 현장실습 중심 교과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함.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을 지역발전 인력양성 사업으로 통합하여 대학의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지방투자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미니클러스터 사업을 활용함. 부처별로 분산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친화형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미니클러스터 사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동인력양성 등 기업간 네트워킹 거점으로 활용함. 아울러 해외 유턴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를 지원하도록 엔터프라이즈 지구 지정을 추진함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지방 중추도시는 행정·교육·의료·문화 등 중심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KTX 등 초고속 교통·정보망이 구축되면서 지방 중추도시가 수행하여 온 고급 기능의 서울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도시의 위상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아울러 지방도시의 공동화와 쇠퇴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지방 중추도시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은 도시권의 규모와 산업기반을 감안하여 특성화된 발전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권의 중심도시는 배후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 중소도시는 도시권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특화된 기능을 육성해야 함. 도시권 육성은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지자체가 협력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함

중추 도시권의 육성과 함께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특히 지방도시 원도심 지역의 주거 및 상업·업무 기능을 재생하여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도록 함. 아울러 노후화된 산업단지, 항만지역, 역세권 등의 재생을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함

도시를 삶의 장소이자 여가 및 경제공간으로서 더욱 매력적이고 경쟁력있게 만드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의료, 문화 등 도시서비스를 확충하고, 시가지 경관, 수변공간, 공원·녹지 등을 정비하여 품격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함

(농어촌 활성화)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사람이 절대 부족하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지역공동체가 붕괴하고 활력이 감퇴되고 있음. 또한 도시에 비해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향후 농어촌은 정주공간, 휴양공간, 산업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의 중심지 읍·면을 생활거점으로 육성함. 기초지자체별로 1~2개 읍·면을 기초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함.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 추진함. 아울러 사회적 기업 등 농어촌 공동체를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하고 공공서비스 시설의 지자체간 공동이용을 적극 장려함

도시민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종합적인 귀촌귀농 지원체제를 구축함. 귀촌귀농에 대한 홍보 및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시민이 농어촌 사회에 융화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 이를 위해 귀촌귀농 지원 종합정보시스템과 중간조직을 설치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 유치를 위해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등의 일자리 공모를 시행함

낙후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지역발전 지표를 토대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등 50개 정도의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하여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낙후지역 활성화 사업은 도로 등 인프라 투자 위주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특화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도록 함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새로운 지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제도 개편을 추진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활력증진특별회계(가칭)’로 개편하며, 회계구조를 3개 계정(광역, 지역, 제주계정)에서 4개 계정으로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 도시권 육성, 농어촌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에 특화하도록 함

도시활성화 계정은 기존의 부처별 도시 관련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시권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함. 농어촌특화발전 계정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화 발전, 교육·의료 등 삶의 질 격차완화와 관련된 사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함. 지역일자리 기반강화 계정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지방투자 촉진 관련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함

지자체의 재정집행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를 개선함. 포괄보조금 배분 방식을 시·도별 배분에서 시·군·구 배분으로 전환하고, 공식에 입각한 배분을 통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아울러 특별회계 사업시행과 관련한 중앙부처 사업지침을 간소화하고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정책을 평가하는 등 지자체 자율성을 증대하도록 함

지자체의 지역발전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자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지방재정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자의적 시행을 억제하고 지역간 차등보조율을 확대함. 지자체의 자체 자원 확충과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및 배분가중치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을 추진함

지자체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의 구조 조정, 재정지출 실명제, 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개선을 추진함.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복지재정 및 민생재정 확보를 위해 분권교부세의 복지교부세 전환을 추진하고, 복지에 산 대비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지역정책의 집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총괄조정 기능과 지자체의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함.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을 추진함. 아울러 새로운 지역정책의 기조와 역점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주무부처를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지역 집행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광역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을 지역발전위원회 기능 개편과 연계하여 재정립하고, 지역별로 설치된 각종 집행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또한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 지원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정책이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I . 대한민국 지역의 어제와 오늘

1.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2. 지역발전의 현주소
 3. 지역정책의 발자취와 향후 방향
-

I. 대한민국 지역의 어제와 오늘

1.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1) 세계속의 대한민국과 대한국민

□ 고도성장을 통한 산업화

-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참화를 딛고 1962년 경제개발에 본격 착수한 지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함
 - 국민총생산은 1960년 20억 달러에서 2010년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1인당 소득은 1960년 79달러에서 2007년 2만 달러 도달
 - ※ 2011년 국내총생산 1조 1,164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 22,489 달러
-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급속한 경제성장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과 근로자의 열성이 결합되어 성공함
- 1960~70년대의 중화학공업, 1990년대 이후의 첨단산업 등 산업 구조고도화로 IT,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2011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8위의 무역대국, 세계 7위의 외환보유국으로 부상

□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동시 달성

- 경제성장의 성과 위에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여 자유로운 정치활동 및 언론을 보장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함
 - 문민정부 출범 이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 전통 확립
-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모범국가로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음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국가발전의 롤모델 제공

□ 선진화를 통한 국격 향상

- 다른 나라들이 몇 세기에 걸쳐 이룩한 선진화를 반세기만에 달성함
 - 2012년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하여 자체적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한 시장규모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확보
 - ※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 IMF는 2016년 30-50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
-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등을 국격 향상과 지역발전의 기회로 성공적으로 활용하였음
 - 주요 국제대회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위상이 대폭 향상되어 새로운 국부 창출의 기회로 연결
- 2000년대 이후 스포츠, 문화예술, 음식 등의 한류가 세계로 전파됨으로써 국가 위상이 더욱 향상되고 있음

□ 자랑스런 대한민국인, 한국스타일

-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반세기만에 우리나라를 세계속의 선진국으로 이끈 일등공신은 매사에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국민 덕분임
-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423시간(2010년)으로 2위인 체코(1,986시간)보다 437시간이나 많음(OECD)
-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성으로 대학진학률,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초중고 학생의 주요과목 학업성취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 세계를 앞서가는 창조적인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어 김연아, 박태환, 소녀시대, 싸이, 반기문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아이콘이 탄생함

2) 국민행복과 국가통합을 위한 당면과제

□ 4대 양극화 해소

① 빈부 격차

-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혜택은 수급자에게 집중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확대
- ⇒ 저소득층, 노인,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복지 향상

② 세대간 격차

-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용없는 성장의 지속,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청년취업 기회가 축소되고 세대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를 실현하여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③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음
- ⇒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가 함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개편

④ 수도권-지방 격차

- 수도권 규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과 지방의 활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음
-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역별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는 지방살리기 정책 추진

□ 30-50 클럽의 조기 진입

① 30-50 클럽의 의미

-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 강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함

※ 독일은 20-50 클럽 가입후 4년, 일본은 5년 걸려 3만 달러 시대에 진입

- 미국의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2012)는 한국이 이미 신흥 강국이 아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며, 향후 5년 내에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② 30-50 클럽 진입의 조건

-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20-50 클럽에 가입한 결과 국부 축적이 선진국에 뒤지므로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필수임
-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총량적인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분배와 복지 향상을 통해 국부를 고르게 향유해야 함
-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 이혼율, 입시과열, 교통사고율 등의 불명예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한 국가로 만들어 가야 함

2. 지역발전의 현주소

1)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침체 지속

- 2000년대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하였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됨
 - 2000~12년간 수도권 인구는 295.8만명 증가한데 비해, 비수도

권 인구는 3.7만명 증가하는데 불과

※ 한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49.4%로 일본(28.0%), 프랑스(18.8%), 영국(12.5%)에 비해 과도한 수준

○ 지방에서 돈을 벌어 수도권에서 쓰는 부의 역류현상이 지속되는 등 생산과 소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의 GRDP는 수도권보다 26조원 많으나 소비지출은 지방이 30조원 이상 많아 지방의 소득이 수도권으로 유출

–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금흐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의 금융기관 예금액 비중은 28.9%에 불과하고, 기업여신은 수도권에 76.5%가 집중(2011년)

○ 서울의 강력한 흡인력으로 지방 주요 도시들의 지역중심지 기능이 쇠퇴하고 지방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 2005~10년간 전국의 144개 도시 중 55개(38.1%) 도시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중이며, 쇠퇴징후 도시를 포함하면 96개(66.6%)에 달함

– 지방도시 쇠퇴는 산업기반 약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인재 유출,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소비 유출, 신개발 위주의 도시개발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 강력한 중앙권력과 지방의 소외

○ 강력한 수도권 권력과 중앙권력에 비하여 지방의 목소리는 미약함

–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과 강력한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가 결합된 중앙권력에 대해 지방은 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

○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요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수렴이나 참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 지방은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 분산, 국책사업 유치, 권한 이양 등을 둘러싸고 상호간에 경쟁과 견제에 치중하는 실정임

2) 지역 주민의 삶과 일터

□ 지역간 삶의 질 격차

- 지방 교육의 질이 갈수록 낮아지고 방과후 학습기회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여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소위 SKY 대, 인서울대학 등 수도권 대학의 선호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학력격차 확대
 - ※ 2000~10년간 사설학원 수강자수는 수도권에서 78.5%가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37.0% 증가에 불과
- 의료 분야에서는 질 높은 시설과 숙련된 의사를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2012)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24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서울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입원 및 외래 진료비(2011)의 31.4%를 타지역 환자가 지출
 - 지방에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상당수
 - ※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한 지역이 52개에 달하고, 분만을 위해 1시간 이상 가야하는 지역도 48개에 달함
-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급 문화예술일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함
 - 국립무용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12개 중 국립민속국악원(남원 소재)을 제외한 11개가 서울에 위치

□ 일자리의 지역간 불균형

- 구직자가 선호하는 우량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됨
 - 2000~10년 기간 중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체의 수도권 비중은 52.4%에서 60.3%로 증가하였고, 상용일자리의 수도권 비중은 49.6%에서 54.1%로 증가

※ 1000대 기업 본사의 70.7%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2007~11년
간 호남권과 동남권에서는 각각 11개, 8개 감소

○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
면서 지방에서는 일자리 감소→인재유출→활력저하의 악순환이
고착화됨

- 2011년 수도권 전체 인구이동은 순유입이 순유출(-8,450명)로
반전되었으나 20대 청년층은 순유입(+43,351명) 지속

- 대졸 이상 고급인력의 지방 유출이 심각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인
력난 및 혁신역량 저하 초래

※ 지방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유출률(2009)이 강원권 56.4%, 충청
권 51.0%에 달함

3) 지역상생발전

□ 지역간 경쟁·갈등구조 심화

○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을 둘러싸고 지역간에 경쟁과 갈등이 심화
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남
부권 신공항 등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갈등 심화

○ 지역간 갈등으로 국책사업의 입지결정이 지연되는 등 시간적·금전
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증가로 귀결됨

○ 서로 인접하는 광역시·도, 시·군 등 지자체간에는 협력보다는 경쟁
이 일반화되어 중복투자와 투자손실 등 자원낭비가 발생함

□ 지역상생의 제도적 토대 취약

○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상생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
적·제도적 장치는 취약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에 지자체간 협력

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선언적이고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실정

-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원확보 및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협약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취약
- 일부 시행중인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은 선도산업 R&D, 문화관광 사업에 치중하여 실질적인 지역상생 발전에는 역부족임

3. 지역정책의 발자취와 향후 방향

1) 참여정부 이전

□ 개발년대의 지역정책(1960-80년대)

-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이 부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발전에 관한 비전과 전략적 개념은 부재함
 - 주요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화학 산업단지 조성 및 SOC 건설이 추진되면서 이후 지역간 불균형 발전 초래
- 도시화 및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주요 도시의 도시과밀 현상이 대두되어 수도권 규제 및 대도시 분산정책을 도입하였음
 -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설치(1971),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1982) 등 규제 위주 정책 시행

□ 민주화·세계화 시대의 지역정책(1990년대 이후)

-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으로 지방의 개발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됨
 - 권한 및 재원의 재분배, 지역개발 사업 유치 등을 둘러싸고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갈등 증폭
- 우루과이라운드 등 세계화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IT, BT, NT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었음

- 지방에 집중 건설된 중화학 공업단지와 달리 첨단산업은 수도권
이 적지가 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

2) 참여정부

□ 주요 정책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에 집중하여 강력한 분산정책을 시행함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의 지방이전 추진
- 지방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별 전략산업(4개) 육성을 추진함
 - 전국에 100여개의 각종 R&D 센터를 설립하여 지방의 신산업 육
성을 도모하고, 신활력사업을 통해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 평가

-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으나
개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을 야
기함
-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론 분열,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
설에 따른 지방도시의 공동화, 지역산업 육성의 지역간 중복투자
및 성과창출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3) 이명박 정부

□ 주요 정책

- 기초-광역-초광역의 3차원 지역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첨단의료
복합단지, 과학벨트,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

- 5+2 광역경제권을 핵심 지역정책으로 추진하고, 선도산업, 선도 산업 인재양성,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함

□ 평가

- 3차원 지역발전 전략은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나 재원부족 및 추진체계 미구축으로 실천력이 수반되지 못하였음
 - 광역경제권을 제외한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
- 광역경제권 전략은 정책수단이나 권역설정에서 현실과 거리가 있어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제한적이었음
 - 선도산업 등 광역경제권 정책수단은 미래성장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지역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요구는 상대적으로 소홀
- 정책의 집행 측면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취약하여 지역정책과 대형 국책사업의 연계가 미흡하고 주요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등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었음

4) 새로운 지역정책의 추진 방향

새로운 지역정책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침체된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제도와 집행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함

□ 지방의 주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 선도산업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보다는 지역 기반산업을 통해 오늘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역산업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지방발전의 중심축으로 중추도시권 육성 추진

-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핵심거점으로서 지방도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추도시권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이 시급함
- 쇠퇴하는 지방도시의 활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함

□ 농어촌 및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삶의 질 향상 추진

- 농어촌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귀촌·귀농을 촉진해야 함
- 도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특화발전을 지원해야 함

□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체계 구축

- 지역일자리 창출, 중추도시권 육성, 농어촌 활성화, 지자체간 연계 협력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야 함
- 지자체의 재정력 확충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함

□ 지역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집행체계 정비

- 지역발전 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강하는 등 집행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함
- 지역별로 설치된 각종 지역정책 집행기구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함

II. 지역발전의 미래상

1.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2. 한반도경제권 구축

II. 지역발전의 미래상

1.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국민의 행복과 지역 통합을 선도하는 살기좋은 지역

□ 목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전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청년, 장년, 노인 등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 도시경쟁력 및 농어촌 활력 강화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통하여 국내외 지역으로부터 창조적인 인재와 우량 기업 유치
- 지역간 상생발전
 -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농촌과 농촌 등 각 지역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 발전

2. 한반도경제권 구축

1) 한반도경제권 구축 필요성

□ 세계와 경쟁 가능한 글로벌 광역경제권 구축

-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에 위치한 소수의 거대도시권(Mega City Region)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음

- 세계적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MCR이 국가경쟁력을 대표하고 있으며, MCR은 인근 지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영향력 확대
- 국내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경제권을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 및 일자리 연계, KTX 등 광역인프라, 교육·문화기반을 활용하여 수도권과 대전 및 충남북, 강원도를 하나의 글로벌경제권으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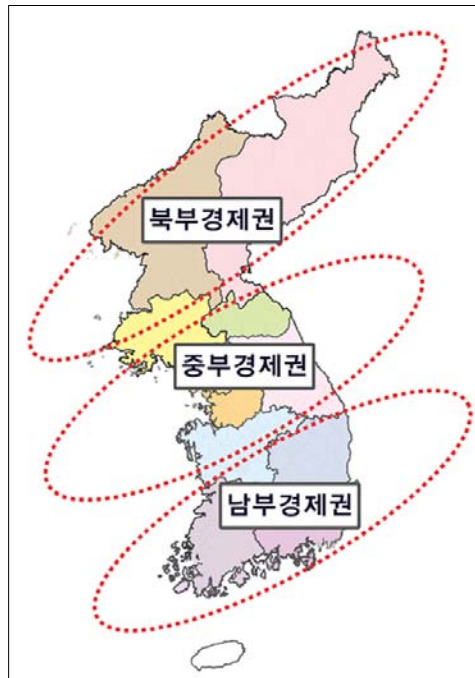
□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통일에 대응

- 중부경제권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남부경제권 구축의 중심축으로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의 글로벌 기능과 지역중심 기능을 강화하며, 영·호남 지역의 중추 도시권을 특화 육성하고 지역간 연계를 강화함

2) 한반도경제권 구축 방향

□ 기본방향

- 통일시대의 국토경영 전략으로 한반도경제권 구축
 - 인구 8,000만명의 통일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자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 국토경영 전략으로 한반도경제권 구축 추진
- 3+1 한반도경제권 구상
 - 남한을 중심으로 글로벌 광역경제권인 중부경제권 및 남부경제권과 제주경제권의 '2+1 글로벌 광역경제권' 구축
 -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전체를 북부경제권으로 하는 '3+1 한반도경제권' 형성



[한반도경제권 구상]

□ 권역별 발전방향

○ 중부경제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 세계속의 중부경제권 : 글로벌허브기능 및 창조산업의 메카

○ 남부경제권(영남권 + 호남권)

⇒ 동북아속의 남부경제권 : 지식기반제조업 및 물류산업 중심지

○ 제주경제권(제주특별자치도)

⇒ 동북아의 해양관광거점 : 세계적인 관광휴양거점

○ 북부경제권(북한 전역)

⇒ 통일 대한민국의 북부경제권 : 자원 및 에너지산업의 중심지

III. 주요 추진전략

1. 지역 일자리 창출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3. 농어촌 활성화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6. 중부·남부경제권 구축

III. 주요 추진전략

1. 지역 일자리 창출

1)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 지속

-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대학졸업자를 중심으로 젊은 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 대졸인력의 수도권 유출률은 50%를 넘으며, 수도권 고교출신 중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대졸자의 87%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에 사람을 잡아둘 수 있는 일자리 부족

- 비수도권의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2008~11년 동안 전국에서 새로 생겨난 연평균 20만명의 일자리 중 15만명이 수도권에서 생겨났으며 비수도권은 5만명에 불과
- 수도권에는 좋은 일자리가 집중되어 비수도권의 인구를 유입함
 -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상용종사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 증가추이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03년 1,472천개에서 2010년 1,775천개로 20.6%(303천개)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기업증가는 동 기간 동안 3.4%(59천개)에 불과하였음

2) 그동안 지역정책은 일자리보다 산업육성에 치중

□ 미래성장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현재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

- 지금까지의 지역 일자리정책은 선도산업, 전략산업 등 특정산업을 지역별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Targeting 전략으로 선정된 산업의 성장을 다른 부문으로 과급하여 고용을 확대하고자 함
- 지역산업육성 대상 업종을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부문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음
- 미래성장동력산업은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역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 ※ 2010년 현재 비수도권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중은 98.8%에 달함

[광역선도산업 1단계사업의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현황]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충청권	NEW IT	차세대무선통신	대경권	그린에너지	태양전지
		그린반도체			수소연료전지
	의약바이오	의약바이오허브연계		IT융복합	의료기기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신약실용화	강원권	의료융합	실용로봇
		태양광			의료융합
	친환경부품소재	태양광		의료융합	의료융합
동남권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카	제주권	의료관광	의료관광
		광기반			의료관광
	수송기계	그린카		물산업	물산업
동남권	수송기계	해양플랜트	제주권	물산업	물산업
		기계기반			MICE
	융합부품소재	안전편의		관광레저	MICE

주) 광역선도산업 1단계사업은 2012년 4월 종료되었으며 현재 2단계사업을 추진중

□ 선도기술 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지역에 일자리와 인력이 모두 부족

- 지역인력 양성체계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미래기술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음

- 선도산업 관련 기업은 주로 수도권 대기업으로 인력양성사업에서 배출된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 발생
- 반면, 지역의 중소기업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지역에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아 구인난에 직면
- ※ 지역대학 배출 인력 중 해당 지역에 취업하는 비중은 수도권(97.0%), 동남권(89.1%), 제주권(87.4%)은 높은 편이나 강원권(56.6%), 충청권(60.5%), 대경권(70.2%), 호남권(72.0%) 등은 역외 유출이 많아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음

○ 산학협력사업의 경우 일부 선도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대학은 산학간 협력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대다수 지역기업이 산학협력에서 소외되고 있는 반면 사업수행 경험에 있는 일부기업의 경우 사업의 중복적, 연속적 지원을 받음

□ 지역산업 지원기관이 너무 많고 추진체계가 복잡

- 지역산업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해 다양한 지역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이 취약한 실정임
- 선도산업지원단, 테크노파크(TP), 연구개발지원단, 연구개발 특구본부, 산단클러스터추진단 등 사업유형별로 지역의 주관기관이 별도 존재하여 지역산업 추진체계상 혼선이 발생
- 광역위는 집행기능이 없어 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광역 단위의 선도산업지원단과 시도 단위의 TP가 기능 및 업무가 중복됨

3)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 신산업육성은 국가성장정책으로 전환

- 선도산업육성 등 국가성장에 필요한 산업정책은 중앙부처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정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개방화와 국제화가 필요한 신산업, 그리고 광역경제권 형성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으로 정책을 추진
- 내일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미래 신산업은 장기적, 지속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전략 하에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 일자리정책은 기업육성정책 중심으로 추진

- ‘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업을 많이 육성하기 위한 기업육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 지역 일자리 정책은 ‘산업’ 육성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 지역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므로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대상은 지역 중소기업이 되어야 함
- 대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지역 중소기업을 잘 아는 중소기업청이 지역 일자리정책 총괄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주체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가 높은 부처가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지식경제부가 지역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보다는 국가적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등 중간조직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업 현장과 밀착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한계
- 지방노동청은 고용보조금, 실업수당, 고용안정 등 근로자 측면의 문제에 치중하고 있어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

- 지자체는 단체장의 정치적 여건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및 추진 여부가 바뀌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미래산업, 대기업 유치,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해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이나 일자리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음
-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청은 지역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중간조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 가능
 - 따라서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을 TP,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배분하여 복잡한 지역산업지원체계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4)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Ⅰ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특화산업 일자리 창출

-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미래성장산업 육성 중심의 광특회계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함
 - 지역의 중소기업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로기술, 경영, 마케팅,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의 청년층들이 다양한 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산업조직에 대한 정책지원 수단을 강화해야 함
 - 사회적 기업 등을 집적화하고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입주 허용, 임대형 아파트형공장 공급을 추진

- 취약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지원, 산학공동연구 등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함
 - 중소기업 R&D는 애로기술 해소, 생산기반기술개발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금형 등의 뿌리산업의 육성이 시급
 - 생산기반기술 지원에 특화되어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 확대
- 지역의 현재 여건과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특화산업과 연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함
 - 지역에 특화되고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많은 전략산업이나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계속하여 일자리 유지 및 증가 도모
- 도시형 산업의 육성을 통한 저소득층 및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방도시에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을 공공 주도로 공급함
- 지역고용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관련 이해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파트너십을 구성하도록 함
 - 지방중기청, 노동청,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 노동조합, 교육청 등이 협력해서 지역의 고용창출 목표와 실행방안을 발굴하여 추진
-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금융, 세제 등 우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② 대학중심의 산학협력에서 기업중심의 산학융합으로

- 지역에서 배출된 인력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정주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인력 및 기능인력을 교육·훈련시켜 지역기업에 취업하는 산학융합 시스템을 구축함
- 현장기능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역밀착도가 높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지역 전문계고 육성을 강화함

- 고졸 취업자의 진학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를 ‘마이스터 대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고급 기술인력으로 양성
- 공과대학 중심으로 1~2학년 과정은 학교 내의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3~4학년에서는 지역 기업과 연계된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Co-op 과정)을 개발하도록 함
-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노동력 공급자인 학생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

<참고> 영국 케임브리지 공과대학의 IfM

- 케임브리지 대학은 영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소(Institute for manufacturing)를 설립하여 기업과 정부의 전략을 개발
- 교육 분야에서는 학부 2년을 마친 이후, 3, 4학년들이 산업체와 연계하여 산학협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형 프로그램을 운영

- 대학을 기업지원의 전진기지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산학협력사업, 인력양성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규모 확대를 추진함
- 산학융합지구(지경부), 창조캠퍼스, HRD 사업(노동부)사업 등을 교과부의 LINC사업(교육부)의 틀 내에서 지역발전 인력양성 사업으로 통합
- 창업보육 단계를 지난 중소기업들이 사업화 단계에까지 진입하고,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이나 인적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 내 신기술기업의 집적화를 도모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 또는 부지에 창업자, 벤처기업 등이 사업화를 위한 공간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의 확대를 추진

③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생산기지’의 이미지가 강한 산업단지를 기업이 입주하고 싶고,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재창조함

※ 산업단지가 지역의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경권 73%, 호남권 70%, 동남권 56%에 달함

- 기존 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지원함
 - 부처별로 추진되는 QWL사업과 산업단지 재생,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 ‘생산’, ‘공장’의 이미지를 풍기는 ‘산업단지’의 명칭을 ‘혁신’, ‘기업’ 등의 이미지가 강조되도록 기업지구 등으로 명칭변경을 검토함
- 거점 산업단지와 주변 산업단지간의 연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미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함
-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미니클러스터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여 대-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공동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함

<참고> 울산 현대자동차와 협력기업들의 상생협력 사례

- 현대자동차(울산)는 지역 협력업체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1차 벤더에서 확장하여 2, 3차 벤더들을 포용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확산
 - 2002년 현대자동차, 현대Mobis 및 180여개의 부품사가 공동 출연하여 자동차부품산업 진흥재단 설립
 -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자금지원, 상생대출, 공정거래협약 등 동반성장 기반 강화

- 해외 U-turn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육성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 도입을 검토함
 - 해외 U-turn 기업의 지방투자 및 정착지원을 위해 엔터프라이즈 존에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세제 및 입지비용 지원 추진

④ 통합적인 지역 일자리 추진체계 확립

- 지방중기청, 지방노동청, 지방교육청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지역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고 발굴하도록 함
- TP, 산업단지공단, 경제자유구역청, 연구개발특구본부 등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협의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지역 일자리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2.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1) 도시의 중요성과 지방도시의 침체

□ 한국은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국가

- 급속한 도시화로 생산 기능과 취업 기회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을 유발하여 1960년대 35.8%였던 도시인구의 비중이 2010년 90.6%로 증가하였음
- 도시는 대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의 활성화가 필수
- 특히, 지방 대도시는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인구나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은 물론 지역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 중심도시들의 공동화와 쇠퇴현상이 빠르게 진행

- 2005~10년간 전국 144개 도시 중 55개(38.1%)에서 도시쇠퇴가 진행 중이고 쇠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포함하면 96개(66.6%)에 달함
- 도시 쇠퇴는 대도시는 도심부, 중규모 도시는 도심과 주변부가 동시에, 소도시는 도시 전체가 쇠퇴하는 경우가 많음

- 도시쇠퇴에 따른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 기업 유치 한계 → 소비 위축 → 지역경제 침체 → 일자리 감소 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권의 붕괴 우려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도시인구 감소는 수도권 도시는 27개 중 2개에 불과하나, 지방 도시는 49개 중 34개에 달함

2) 도시정책의 문제점과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필요성

□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부재

- 지금까지 도시정책은 개발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 규제에 초점을 두어 도시경제 활성화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소홀하였음
 -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재개발 등 도시인구가 성장하는 개발 연대에 도입된 도시정책 추진으로 인구 저성장 및 탈도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수단이 부족함
- 특히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쇠퇴와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양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대 부족함
 - 도시 재생·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재원과 추진조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부처별 산발적, 개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지방의 침체 극복을 위해 지방 중추도시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

- 지방 중추도시는 역사적으로 행정·교육·의료·문화 등 지역 공공서비스 공급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산업·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음
 - KTX 등 초고속 교통·정보망 구축으로 지방 중추도시가 수행하여 온 고급 기능의 서울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도시의 중심지 위상이 크게 저하

- 따라서 지방 중추도시의 산업, 교육, 의료, 문화, 주거, 교통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방경제를 지원하는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지역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함
- 지방 중추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

<참고> 선진국의 도시정책 동향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경쟁의 대응과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권 육성과 도시 재생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 미국 오바마 정부는 침체에 빠진 미국경제 극복을 위한 해법의 일환으로 도시권 국가(Metro Nation)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백악관에 도시정책실(Office of Urban Policy)을 신설
 -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대도시 중심의 도시권 정책 추진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 2→3만불 전환 시점에 도시재생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본격 추진

3)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① 지방 중추도시권 특화 육성

중심 도시	부산(울산, 창원), 대구(구미), 대전(세종, 청주), 광주(나주), 전주(익산, 군산)
발전 방향	지방 도시권 발전의 선도 거점지역으로 육성 지역 거점기능의 제고를 위한 도시 중심성 강화
주요 정책과제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복합개발 등을 통한 도시(도심) 재생

□ 부산(울산, 창원)권 :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 경제권의 핵심도시권

- 부산은 동북아 해양 비즈니스 및 남부 경제권의 경제수도 기능 확충

- 부산 신행만을 아시아 최고 수준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고, 국제물류 지원단지와 항만 비즈니스센터 등을 건립하여 해양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 국가 기간산업, 해양 산업, 선박 금융, MICE 산업, 과학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국내외 기업 유치, 고급 인력 정착, 삶의 질 제고 등을 통해 제2의 수도 기능 강화

○ 울산·창원의 특화 발전 및 연계협력을 통한 도시권 육성

- 동남해안 국가 기간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IT 융합 지식기반산업 육성
- 울산, 창원의 국가기간산업 연관산업 및 협력 산업과 기술집약형 강소형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해양 관련 융·복합 R&D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해양문화·관광산업의 특화 육성

□ 지방 대도시권 : 지역별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 대구(구미) 대도시권 : 동남권 내륙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 산업기능 강화 및 도심 재생

- 그린에너지 및 IT 융·복합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식기반 산업기능 강화
- 교육·학술자원을 활용한 지식클러스터 조성 및 인적자원 개발로 일자리 창출기능 확대

○ 대전(세종, 청주) 대도시권 : 세종시 출범과 연계하여 국가중추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기능 확충과 도시경쟁력 강화

- 중부경제권의 중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 연구개발, 국방 등 국가 중심기능의 지원기반 구축
-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기능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 신도심 개발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재생을 추진하여 도시 활력 복원
- **광주(나주) 대도시권** : 광주의 중심성 강화와 함께 무안·목포·광양·만권과의 기능적 연계를 구축하여 발전축 형성
 - 과학기술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광융합 기반산업 등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기능 확충
 - 문화·예술 복합기능을 육성하여 아시아 문화·예술관광의 허브화 추진
- **전주(익산·군산) 대도시권** : 도시별 도심 재생과 함께 전주-익산-군산의 연계를 강화하여 연담도시권 형성
 - 새만금 개발과 연계하여 미래 서해안 중부지역의 국가발전 전략기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별 기능 특화
 - 식품산업의 전략적 허브 기능 강화 및 첨단 부품소재 R&D 기능 확충

□ **중소도시권 : 대도시권 기능을 보완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

중심 도시	천안·아산, 포항·경주, 광양만(여수·순천·광양), 진주·사천, 제주, 원주, 춘천, 안동·영주
발전 방향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균형발전의 중심지 역할 대도시권과의 기능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주요 정책과제	도시별 여건과 기능을 감안한 특화발전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서비스 기능의 집중·연계

- **천안·아산권** : 세계적인 기업과 지역대학을 연계한 산학융합을 구축하여 아시아의 실리콘 벨리로 육성
- **포항·경주권** : 포항-경주-울산의 삼각 산업경제권 구축과 문화·관광 기능 확충으로 동해안 융·복합 관광·휴양벨트 중심거점 육성
- **광양만(여수, 순천, 광양)권** : 국가 기간산업 및 국제물류·교역 기

능 강화와 함께 남해안 중부의 관광휴양 거점으로 육성

- **진주·사천권** : 항공소재 산업 및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수변·해양 관광 및 농식품 연구개발 거점화
- **제주권** : 국제자유도시로서 관광·휴양, 컨벤션, 쇼핑 산업을 육성하고, 청정환경을 활용한 식품·생물산업 기반 강화
- **원주권** :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과의 연계하여 의료기기 생산 전용단지 조성 등 첨단 의료기기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춘천권** : 강원지역 행정·교육 중심기능 강화와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광산업 등 소프트산업 거점으로 육성
- **안동·영주권** :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도시권으로 생물·한방산업, 휴양산업의 육성 및 향토자원의 특화 개발
- **목포·무안권** : 신성장 동력으로 파인세라믹 산업과 조선 산업 육성 및 다도해 관광산업의 거점 기능 강화

②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지방도시 원도심 지역의 주거·상업 기능 재생으로 도시의 활력을 복원하고, 특히 대도시의 산단·항만·역세권 등 경제기반시설의 적극적 재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

- 원도심 재생은 도시의 중심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로서 상업·업무 기능의 재생과 함께 도심 주거기능의 회복을 동시에 추진함
 - 대도시권 광역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정비, 상업지역 재개발사업 추진
 - 재정비촉진사업(중심지형, 주거지형), 중심 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 도심 유희공간의 창조적 재생(예술가 레지던스 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등 추진

- 기성 시가지내 주거기능 재생을 통해 도심 지역의 활동인구를 확보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수준 향상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환경 재생, 취약계층 소규모 주택 개량(해피 하우스 사업 확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도심 공가 리모델링,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등 추진
- 지역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테마의 도입과 보행환경 정비 등의 상업 기능 재생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함
 - 재래시장 활성화, 상점가 보행환경 정비, 도심 소공원 조성, 골목상권 정비 등 추진
- 노후화된 산업단지·항만용지의 시설·기능 전환을 위한 토지이용변경과 구도심 역세권 정비 등 경제 기반시설의 재생과 기능 확충을 추진함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공업지역 재생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항만 재개발사업 등 추진
- 원도심 지역 및 주거·상업 기능의 재생은 지자체가 주도로 추진하고, 산단·항만 등의 기간시설의 기능 재생은 국가 주도로 추진함
 -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 지원체계 마련
 - ‘도시재생법(가칭)’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③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교육·의료·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시가지 경관·수변공간·공원·녹지 등의 정비를 통한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활성화 기반을 마련함

- 지역 의료 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심도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도시권 단위의 응급의료체제 구축(예: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운영)
 - 도시권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 응급 헬기 지원, 공중보건의 파견(중심도시→주변지역),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추진
- 도시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와 함께 역사·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창조적인 경제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며, 다양한 도시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함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시민예술촌 조성사업, 예술가 레지던스 사업 등 추진
 - 경관·공공디자인 사업 등 도시경관 및 환경 정비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관련 사업
 - 수변공간 및 공원·녹지 정비 사업 등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고교육성 등 지방교육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
 - 지방 도시에 소재한 우수대학을 지역별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지방 도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 도모
 - 지방 중소도시의 특성화 고교 유치를 지원하여 특화된 교육 경쟁력 확보
- 지자체가 주도하여 특화된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도록 함
 - 개별부처 사업 중 교육·의료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개선

4 지자체간 연계협력 확대로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거점도시-주변지역간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도시권내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급·처리 및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서비스 시설의 공동 개발·이용 등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촉진하여 상생발전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함

- 도시권내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시권 연계 교통시설의 정비 및 대중교통 광역화를 추진함
 - 중심도시와 도시권내 지자체를 연결하는 연계 도로망 확충
 - 도시권을 운행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통합요금제 도입
 - 지역생활서비스 시설 이용에 필요한 커뮤니티 버스의 공동 운행 (예: 복지·의료·문화 등 서비스거점 연결 버스, 수요응답형(On Demand) 버스 도입 등)
- 도시권 단위로 생활기반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비스 공급비용의 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
 -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등
 - 예술회관 등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지자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유사 목적의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의 통합·운영
 -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동이용 및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서비스의 제공 및 지역 공동체 의식 제고(예 : A시 콘서트홀, B시 전시관, C시 체육관 등)
- 도시권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수혜 비중에 근거하여 지자체간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
 - 공공서비스 공급을 도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고보조를 상향 지원
 - 공공서비스 사업·시설의 수혜자 분포에 따라 중심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

⑤ 중추도시권 육성 지원체계 구축

- 중추도시권 육성 사업은 지방 도시권의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중추도시의 중심기능 회복 및 생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둠
 - 도시권 특화사업, 도시재생사업, 삶의 질 향상 사업, 도시권 인프라 정비사업 등으로 유형화
 - 사업추진은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중앙부처는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 특별회계를 통해 포괄 지원
- 중추도시권 육성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단기적으로는 균특법을 개정하여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함
 - 균특법을 개정하여 사업 대상에 “도시권의 기능회복 및 지역생활 서비스 향상”을 추가
 - “도시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내용은 도시권 대상지역의 선정 기준, 사업유형, 사업 추진절차, 추진기구, 재정지원, 역할분담 등을 포함
- 중추도시권 육성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광특회계를 개편하여 도시권 활성화 계정 설치를 추진함
 - 도시권 활성화 계정은 기존의 지역계정 사업 중 도시활력증진사업, 성장촉진지구·개발촉진지구사업, 도시환경개선, 지방상수도사업, 지역문화·관광사업, 물류·유통기반 확충사업 등 이관
- 개별 부처사업 중 도시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권 활성화 계정으로 이관하여 도시권 육성 관련 재원 확대를 추진함
 - 예: (국토해양부) 주거환경재생사업,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사업, 노후공단 정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등

3. 농어촌 활성화

1) 농어촌의 현재와 미래 모습

□ 농어촌에 사람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지역공동체 붕괴와 활력 감퇴의 원인으로 작용

○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2000~2010) 도시인구는 10.1% 증가한 반면 농어촌 인구는 3.7% 감소

○ 농어촌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2010년)를 보면, 전국은 11.3%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20.6%

○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 증가로 향후 농어촌 인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 농어촌 인구(읍·면 인구)는 2010년 8,758천 명에서 2020년 9,832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향촌형 인구이동(92만 6천명)이 향도형 인구이동(83만 명)을 초과하였고, 귀촌·귀농 가구는 2000년 1,154가구에서 2011년 10,503가구, 2012년 상반기에 8,706가구로 크게 증가

□ 농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의 걸림돌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도시 주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주민의 40.3%가 만족한 반면, 농어촌 주민은 29.7%만 만족

○ 농어촌의 의료 및 교육환경은 도시에 비해 열악함

－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85% 이상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

－ 여러 학년이 함께 수업하는 복식학교 비율이 도시(1.7%)에 비해 농촌(28.6%)이 압도적으로 높음

□ 향후 농어촌은 도시민이 함께하는 정주공간, 산업공간, 휴양공간으로 전환될 전망

- 농어촌 공간은 삶터와 쉼터로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될 것으로 예상됨
 - 귀촌·귀농에 의한 탈도시화가 촉진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거주지 이전 현상이 늘어날 전망
- 아울러 일터로서의 농어촌 공간도 기능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농어촌은 테마여행, 문화 창작, 생태 등 자연과 문화가 결합되는 공간이 되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2) 기존 농어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

□ 기존 농어촌 정책의 성과

- 농어촌 정책의 영역이 과거에는 농어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농어촌관광, 환경 및 경관 보전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음
- 지역의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년 제정)’을 근거로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농어촌정책과 관련된 중앙부처간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
 -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2008년)으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농어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참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위원장(1명): 국무총리
- 위원 (25명 이내): 기획재정부장관 등 11개 중앙부처의 장관 (간사위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농어업인(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 역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기본계획 심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등

□ 기존 농어촌 정책의 한계

- 하드웨어적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대다수의 시설 및 설비들이 이용률 저하로 방치되고 있거나 심각한 운영난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 농어촌 중심지 육성 정책 역시 시설설치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하였음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등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농어촌중심지의 기능과 연계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
-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는 귀촌귀농 지원을 위한 정책은 과도한 홍보 전략과 개별 지원방식으로 귀촌귀농에 대한 도시민의 환상과 기대감을 부추기는 실정임
 - 무분별한 도시민의 유입 정책으로 이들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효과가 정책적 노력에 비해 미미
 - 도시민들이 귀촌귀농에 대한 목표 설정이나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등 현실적인 접근보다는 정부지원 (자금)에 의존하려는 속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실패할 가능성 존재
 - 농촌지역 원주민과의 위화감이나 갈등관계를 조성하는 원인
-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역 역량이 부족하여 실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방비 부담이 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움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의 실질적 역할이 미흡함
 -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도·농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3) 농어촌 활성화 정책의 주요 과제

① 중심지 읍·면을 농어촌의 생활 거점으로 육성

-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마을 단위의 분산투자 개발방식으로 농어촌 생활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소도읍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농어촌 개발 사업은 투자규모에 비해 체감효과가 낮음
- 따라서 농어촌의 중심지 읍·면 육성을 통해 공공서비스 기능을 복합·연계하여 도시권 기능과 연결되는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함
 -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귀촌·귀농인들이 농어촌 중심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및 공공서비스 개선
- 중심지 읍·면 육성을 위해 기초지자체별로 1~2개 정도의 읍·면을 선정하고 지역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기초 생활서비스를 배치함
 - 중심지 읍·면은 배후마을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역할을 하고, 상위도시와의 연결 기능을 담당
 -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상 1차 거점은 농어촌 중심지 읍·면소재지, 2차 거점은 중소도시권, 3차 거점은 대도시권에서 담당
- 중심지 읍·면의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함
 - 지역의 여건에 맞게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문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설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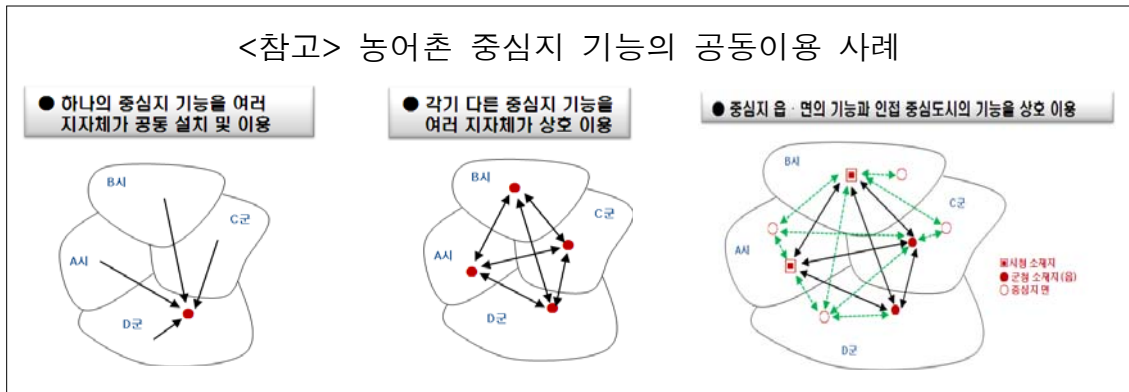
- 공공서비스 복합지원센터의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귀촌·귀농인의 복합시설 인근 정착을 유도하고 원격지 주민들에게 교통 서비스 제공

<참고> 농어촌 공공서비스 복합시설 사례

- 충북 옥천군 안남면 배바우작은도서관: 도서관의 기능, 방과후 놀이방, 주민교육 및 토론회의장으로 사용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여성농업인센터: 기존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여성농업인에게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귀촌·귀농 가정의 생활관련 상담 및 안내
- 강원 영양군 입암면, 수비면 등 원격지 면소재지: 복지회관을 활용하여 보건지소, 목욕탕, 건강관리실 등 운영

②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 육성 및 공공시설의 지역간 공동이용

- 교육·의료·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
 - 공동체의 운영비나 인건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검토
 - ※ 안성의료생협 사례: 순수 민간 의료협동조합으로 4,5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음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12.12.1 시행)으로 교육·복지·문화·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등의 조직이 가능해졌음
 - (교육) 대안학교, 농산어촌유학, 방과후 활동 등
 -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 어린이집 등
- 공공시설 등 중심지 기능을 다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사업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지자체간에 연계협력사업과 연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③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정책의 개선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항목별로 관련 공공서비스 공급전략을 차별화함
 - 예: 하수도(주거분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교육분야), 응급서비스(응급분야) 등 기준항목의 이행실태가 저조한 지자체를 집중적으로 관리
 - ※ 참고: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항목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분야 등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성
- 농어촌 서비스기준 평가결과 이행실태가 저조한 항목의 해당 부처는 해당 지자체에 대한 추가지원 또는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그 역할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④ 귀촌·귀농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귀촌·귀농자들이 농촌 사회에 융화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

- 귀촌·귀농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빈집, 지역일자리, 농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도록 함
 - 전국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귀촌귀농정보 포털사이트 개발 운영
- 지역에 필요한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협의하여 도시민의 재능이 필요한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공모를 실시함
- ※ 일자리 공모 대상 분야(예): 지역개발사업, 마을기업이나 공동체 사업 등의 기획, 설계, 회계, 홍보 및 마케팅, 지역의 복지 관련 일자리 등
- 귀촌·귀농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읍·면 단위별로 민간 주도의 현장밀착형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예비 귀촌·귀농인에 대한 지역 상세정보 및 각종 정책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귀촌·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 프로그램 운영, 귀촌귀농인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활동가를 발굴하여 육성함
 - 귀촌·귀농인의 경험·능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경영, 회계, 마케팅 등), 수익모델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성공사례 및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교육 등 지원
- 귀촌귀농인의 정착을 위해 소규모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빈집 리모델링 후 임대, 읍·면 소재지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공간을 조성함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통합 추진함

-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해소 등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거버넌스 구축
-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내용을 선정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 수익모델 창출 등 자생력 제고

⑤ 낙후지역 특화발전 및 활성화 지원

-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사업을 각기 다른 부처에서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낭비를 제거해야 함
- 또한, 도로투자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부족한 문제도 해소 필요

<참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 현황

- 전국의 기초생활권(163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으로 구분하고 포괄보조금을 도입하여 추진
 - 성장촉진지역은 생활, 환경, 개발 등의 여건이 불리한 지역(70개 시군, 186개 도서)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등 인프라 시설과 기초생활환경 시설 개선을 지원
 - 특수상황지역은 군사목적 등의 규제로 개발이 정체된 지역(15개 접경지역 시군, 186개 도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생활기반시설 구축, 지역소득 증대 등을 추진

-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지표에 의해 50개 정도의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사업을 추진함
- 낙후지역 활성화사업은 도로 등 인프라 투자 위주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특화자원 개발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
 - 특화제품의 개발, 유통, 판매, 지역 특화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착기반 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 추진

-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 지원 및 추진체계를 구축함
 - 50개 정도의 낙후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사업제안서 평가와 낙후도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의 재원을 차등 지원(예: 지역별 30억원 내외, 총 1,500억원 규모)
 -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포괄지원을 통한 전면 자율방식으로 추진하고, 지자체간 협력 여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주민단체, 지역기업, 대학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자문단 구성

4. 지역발전 재정지원체계 재편

1) 지역발전 재정지원의 중요성

□ 재정은 지역 주도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

-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함
 - 그러나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신장률은 5.9%로 국세 신장률(7.3%)보다 낮아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우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국가재정 중에서 지자체 세입은 20%에 불과하지만 재정사용액은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무가 증가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사용액은(2012년) 중앙 42.5%, 지방 42.2%, 지방교육 15.0%를 차지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005년 17조 4,480억원, 2011년 28조 1,618억원으로 증가
- 지방재정은 의존재원 비율이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 비율이 35%를 차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재원 규모 확대가 필요함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1년 51.9%로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는 2008년 79.5%에서 2011년 76.7%로 감소

□ 글로벌 경제위기, 복지수요 증가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재원 확보 필요

-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증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임
 - 지자체의 총지출 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은 2007년 15.4%에서 2011년 28.5%로 연평균증가율 13.3%를 보이고 있음
-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재정정책이 중요함
 -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와 지역 밀착형(지역 현안) 지원이 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정책이 중요

2) 지역발전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

□ 광특회계의 자율성 미비와 규모 축소, 부처 사업별 중복성 및 책임성 결여

- 군특회계에서 광특회계로 개편 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추구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사업 규모가 축소됨
 - 광특회계 규모는 2009년 9.58조원에서 2012년 9.41조원으로 감소하였고, 중앙정부 시각에서 사업을 선정·운영

- 광역선도산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역할 및 차별성이 모호하고, 부처간 또는 부처내 경쟁 추진에 따라 사업지원의 효율성이 부족하고 책임성도 모호함
- 재원배분 방식에서 지방비 부담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포괄보조금의 기초지자체 자율성 침해와 평가체계 부실

-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보조금을 배분하면 이를 다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기획 및 운용이 제약을 받고 있음
-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처별로 실시되어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고, 사업별 중복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평가가 이루어져 지자체가 당초 의도한 자율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국고보조사업의 경직성 및 지방부담 확대와 사업선정의 불합리

-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유형 및 사업선정 원칙이 결여되고, 기준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설정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부처의 지자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정치적 필요 등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고, 합리적·체계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와 함께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008년 35%→2012년 39%)
-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국가최저 또는 표준서비스 공급의 보조사업 본래의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음

□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 논란 및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사이의 인식 차가 커서 공감대 형성이 곤란함
-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시·도간 차등 배분(100, 200, 300의 가중치)되고 있으나 배분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출연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지역간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됨
 - 수도권 22.5%, 비수도권 광역시 28.1%, 비수도권 도 49.4%로 배분되고 있으나, 지역간 재정불균형 심화 문제가 제기

□ 지자체의 비효율적 재정지출 및 복지예산 증대로 자체사업 축소

- 지자체의 중복성 투자나 선심성 사업, 타당성 검사의 미비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이 많음
- 지방재정 전체 세출예산 중 복지관련 예산 수요 증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의 축소를 이어짐
 - 사회복지 관련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전체 지방예산 증가율 4.9%를 크게 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발전사업 예산 축소가 불가피
 - ※ 2012년 지자체 예산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5%이며, 시도 25.1%, 시26%, 군16.9%, 자치구 46.1%로 자치구의 부담이 가장 큼
- 복지사업 등 90개의 분권교부세 사업은 2014년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계획이나 급증하는 복지사업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임

3)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① ‘광특회계’를 ‘지역활력증진특별회계’로 개편

□ ‘광특회계’를 ‘(가칭)지역활력증진특별회계’로 개편하며, 계정을 3개 계정에서 4개 계정으로 개편

- 회계명칭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활력증진특별회계
(가칭)’로 개편하며, 회계구조를 현행 3개 계정에서 4개 계정으로
개편하도록 함
 - 계정으로 일자리 창출, 도시권 육성, 농어촌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지원사업에 특화
- (지역일자리기반강화 계정)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지방투자 촉진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함
 - 사업 구성은 기존사업 중 지역산업·인력양성 등을 재편하고, 타
회계 사업 이관 및 신규 사업을 발굴 및 추진
 - 중소기업 육성은 기존의 전략·특화산업 지원사업을 중기청 사업과
통·폐합 후 재구성하여 중기청 사업으로 추진
 - 중기청 R&D 중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분(55.6%)과 전략·특화
산업 R&D를 통합하여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R&D사업으로 재편
 - TP, 특화센터, 혁신센터 지원사업을 중소기업혁신거점사업(가
칭)으로 통합하여 시도를 통해 TP에 포괄 지원
 - 기업지원 관련 예산은 TP 등의 기업지원실적, 장비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자자체별로 차등지원
 - 인력양성·산학협력은,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Co-op 교
육, 후진학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을
확대하며, 평생교육 사업을 통한 지역의 인재 양성, 대학·전문대
역량강화와 LINC 사업을 추진
 - 지방투자 촉진사업은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개편하여, U-turn
기업,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도시활성화 계정) 각 부처별 도시 관련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

- 기존 광특회계 사업 중 도시활력증진지역, 성장촉진지역 및 18개 기능별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권 관련 중앙부처 사업을 선별, 재분류 후 기능별로 재편

※ 주거환경재생사업, 도시내 소형 주택공급사업, 노후공단 정비사업(국토부), 문화공간조성,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사업(문체부) 등

- 신규 사업은 도시권 연계교통망, 주거지 재생, 문화·예술 테마를 활용한 도시개발 등을 발굴

- 운용 방식은 지자체가 계획 수립 후 부처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 및 확정 후 특·광역시·시·군별로 포괄보조금을 지원

○ (농어촌특화발전 계정) 농어촌 지역의 특성화 발전, 교육·의료 등 격차완화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 지원함

- 사업 구성은, 시·군 주도의 낙후지역 발전사업, 국가 주도의 삶의 질 격차 완화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됨

- 운영 방식은, 시·도별 배분에서 시·군별 배분방식으로 전환

· 시·군자율편성사업(소도읍·접경·도서)은 지역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배분

· 지역계정의 18개 기능사업은 부처별로 통폐합하여 재정비 후 배분공식에 따라 시·군으로 직접 배분 방식

· 시·군의 자유로운 사업기획이나 집행을 보장하되 지자체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위와 지역위가 컨설팅 지원을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기존의 사업을 유지

□ 회계 및 기금간 사업 조정을 통한 회계 운용의 효율화

○ 기존 광특회계에서 타 회계로 이관되는 사업은 5개 단위사업, 1.3조원 규모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거점기관지원사업 등 국가R&D와 중복되는

사업, 광역철도와 같이 국가기간망 계획과의 연계성이 중요한 SOC사업, 국가정책적 목표하에 지정,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정책지구)

○ 타회계·기금에서 신설회계로 이관할 사업은 27개 단위사업, 9,796억원 규모임

－ 도시재생관련사업과 농어촌종합개발 사업, 귀농귀촌 정책관련 사업, 생활기초 인프라 관련 사업, 일자리·지역경쟁력 관련 사업 등

※예 : · 의료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분만취약자 지원사업 등

· 교육 : 지방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마이스터고 육성사업 등

· 기초 생활기반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전기공급 사업 등

□ 포괄보조금 조정 및 평가체계 개편을 통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

○ 포괄보조금사업의 배분방식인 시도별 배분을 시군구 배분으로 조정하고, 공식에 입각한 배분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중앙부처 사업지침을 간소화하여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자율성 침해 소지 여부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함

○ 사업의 부처 자체평가를 폐지하고, 재정당국의 회계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 평가로 일원화하며, 정책평가는 세부내역사업에서 포괄보조사업 단위평가로 전환함

②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과제

□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한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 국고보조 대상사업을 유형화(정형화)하여 보조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정책 자의성을 최소화함

○ 국고보조금의 운영상 경직성을 완화하고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성을 담보함

○ 10~100%로 다양한 기준 보조율을 5단계 내외로 간소화하며, 차등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2014년까지 연장 운용 중인 분권교부세 제도 중 복지사무를 국가 사무로 환원하고 복지교부세 신설을 검토함
- 국고보조율 조정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결정시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함

□ 지방소비세제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 재원확보

-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하고, 배분 가중치를 조정하여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
 - 세율 10% 인상 이후, 각 지자체의 자율 재정 확보를 위해 현 가중치 100, 200, 300에 대한 재조정 추진
 - ※ 가중치 조정시 1차적으로 공간적 가중치, 그리고 2차적으로 재정력과 재정자주도 반영
 - 세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사업보전분 등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재정형평화 재원을 확충
 - 지방소비세 과표를 거주지원칙 지표 대신 소비지원칙 지표(지역토착 업종의 매출액)로 전환
-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발전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배분 기준의 현실화를 검토함
 - 지방소비세의 35%인 재원규모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다 명확한 용도를 설정
 - 지방소비세와 함께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무리한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시스템인 e-호조시스템과 연계하여 재정지출 실명제를 실시함
-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자체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

-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에 재정지출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 개발함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재정 및 민생재정 확보

- 분권교부세를 복지교부세로 전환하여 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며, 지방이 집행하는 체제로 시스템을 구축함

※ 지자체 재정현황 및 특성에 맞게 차등적 지원체계 구축

-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보조금 관리 기본법에 차등보조율 지표 마련)
- 우선 복지지출 상한제를 도입하여 복지지출에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당초 복지예산 대비 초과 수요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참고> 미국, 영국, 일본 정부의 복지비 지출

- 미국의 공공선택론자에 의한 재정분권이론과 신재정연방주의는 주정부 중심의 분권형 복지정책 거버넌스와 연방정부의 복지비 부담 축소 정책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분야의 분권을 反복지로 인식하는 경향
- 영국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면서 복지비 지출을 축소
- 일본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삼위일체개혁을 통해 재정분권을 확대하면서 복지비 부담을 지방에 전가

5. 지역정책 집행체계 개편

1) 지역정책 집행체계의 문제점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집행체계

-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집행체계를 구축하였음
 - 중앙정부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자체에 혁신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산업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별 조직 설치
 -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지자체간 경쟁과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심화
 - 또한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의 역량강화 및 자율적 집행기반 구축에는 소홀
-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집행체계는 외형상으로는 참여정부와 큰 차이가 없으나 실제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등 질적인 면에서 후퇴함
 -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광특회계 사전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등 위상과 권한이 참여정부에 비해 축소되어 존재감이 약화
 - 지방에서는 광역발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선도산업, 인력양성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집행기관을 설치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 분산

□ 지역정책 주관기관의 역할 및 역량 부족

- 지역정책의 총괄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조직, 인력, 재원, 권한이 부족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역발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둘러싸고 부처간 중복, 경쟁, 시너지 창출 미약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

- 중앙정부 지역정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부처간 사업 조정 및 총괄 역량이 부족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 발휘가 곤란함
- 광역경제권 육성 정책의 경우 지역산업 중심으로 운용하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등 타 부처 지역개발 사업과 통합적 시너지 창출 미흡

□ 지방 집행조직의 역량 부족 및 협력체계 미약

- 지자체의 기획·집행 역량 및 재정력이 부족하고, 타 지자체와 연계협력보다는 상호 견제와 경쟁에 치중하여 중복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함
- 기초지자체는 인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하고 지역발전사업 기획 및 집행기능이 취약하여 중앙정부 및 외부 의존도 심화
-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간 협력과 갈등조정 및 역량강화에는 소홀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을 둘러싸고 타 지자체와 경쟁에 주력
-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자체간 협의기구 형태로 법인격과 예산권 및 집행권이 없어 지역발전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권한 및 역량이 결여
- 아울러 광역발전위원회, 선도산업지원단,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지역의 집행기관을 연계·통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여 정책의 시너지 창출 미흡

2) 지역정책 집행체계 재편 방안

① 정책 총괄기관의 역할 재편

□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 지역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주요 지역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사업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광특회계 예산 사전심의

기능이 없는 등 정책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부족함

-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에서 행정 위원회로 법적 지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위원회로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전략·계획의 수립 및 심의, 광특회계 예산 심의·조정, 연계협력사업 등 일부사업의 집행, 지역정책 연구·조사·분석, 국제협력, 지역발전 시책의 성과 평가 및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비상설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상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재편(2011년)된 바 있으며, 프랑스의 DATAR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정책의 기획·조정 및 핵심 지역개발 사업 총괄
- 지역발전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기존에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의 양보 및 협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존속시키면서 지역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주무부처를 변경하여 집행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주무부처 변경

- 중앙정부 주무부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지역정책의 총괄·조정·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기존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부처위상 및 정책조정 기능, 새로운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적합성이 낮으므로 타 부처로 이관을 검토함

- 주무부처 변경시 대상 부처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의 총괄부서로서 지자체와의 관계 및 지역 이해가 우수하고,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지역정책 업무와 연관성도 있으나, 다양한 부처의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역량은 미지수임
 - 기획재정부 : 고유의 예산조정 기능과 새로운 부처 총괄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정책의 조정·관리가 용이하고, 지역정책·계획과 예산의 정합성 확보 등에 유리하나, 부처내에서 고유업무에 비해 지역정책의 비중 및 위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국토해양부 및 농식품부 : 도시 및 농촌지역 개발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부서로서 국토해양부는 도시권, 낙후지역, 기반시설 등 지역정책과 업무 관련성이 높고,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발전 및 삶의 질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 부처 공히 부처간 이해관계 및 예산 조정 기능의 원만한 수행 여부는 미지수임
- 지역정책 주무부처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지역정책의 기조와 역점시책, 주무부처의 역할과 지역발전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함

② 지역 집행기관의 역할 강화

□ 광역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재편

- 지역발전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기관의 명칭, 위상, 기능을 재편하여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업무의 지역별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기존의 기능 및 조직을 보강하여 지역별 계획수립, 연계협력사업 발굴, 사업 관리·평가, 조사·분석 등의 업무 수행
- ※ 00권발전위원회(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등 8개 지역에 설치

- 개편되는 광역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지역별 집행기관 상호간의 연계운영 체계를 구축함
 - TP, 선도산업지원단, 산단공, 중기청, 노동청, 국토청 등 지역발전 집행기관의 연계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 예: 관련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지역발전집행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관
 -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연계하여 지역별 총괄기구 설치 추진(일본 큐슈 광역행정기구 추진사례 참고)

□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지자체 지원·조정 기능 강화

- 중앙부처에 대한 관할지역 사업의 예산지원 신청, 기초지자체의 사업 기획·집행·평가 지원, 지역내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지역발전 사업의 지원창구(Clearing House) 역할을 강화함
- 관할지역내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조정 및 연계협력 지원을 통해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상생발전을 유도함

□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및 역량 강화

- 독자적인 사업 기획, 집행,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함
- 기초지자체의 재정력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확대, 민자유치 및 지방채 발행 지원, 포괄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함

③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

- 개별 지자체로는 규모의 경제 확보가 어렵고 예산부담이 과중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계협력사업을 대폭 활성화함

- 문화관광 및 R&D 분야에 치중된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일자리, 복지, 교육, 인프라(교통, 환경, 수자원, 방재 등)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 추진주체별 협력: 기초-기초간, 기초-광역간, 광역-광역간 협력
 - 지역유형별 협력: 도시-도시간, 도시-농촌간, 농촌-농촌간 협력
 - 사업분야별 협력: 의료·복지·교육·교통·환경·수자원·방재 협력
-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광특회계 연계협력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지자체 매칭비율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협약체결, 추진조직 구성, 재원분담, 협약 이행장치 등을 규정하는 (가칭)지역간 연계협력 촉진법 제정을 추진함

4 정책 평가제도 개선

- 지역발전위원회의 총괄평가 기능을 강화하도록 재정사업자율평가(기재부)를 지역위 평가로 일원화하고, 중앙부처의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평가는 폐지하도록 함
- 지자체의 평가부담 완화 및 내실화를 위해 평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제외하고, 포괄보조사업은 내역사업 대신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평가함
 -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신 연차별로 중점 사업 또는 사업군을 평가하는 집중평가 방식 도입
- 성과중심, 현장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신상필벌과 정책반영을 강화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함
 - 추상적·정성적 평가지표를 구체적·정량적 평가지표로 대체하고 현장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확대

6. 중부·남부경제권 구축

1) ‘3+1 한반도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 세계는 지금 대도시권(Mega City Region) 경쟁시대

- 세계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MCR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인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MCR은 인근 지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한계

-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정책의 공간단위를 경제권이 아닌 행정단위(시·도)의 단순 집합으로 설정, 실질적으로 작동하는데 한계
- 선도프로젝트 중심의 선도산업과 SOC사업 등에 집중함으로써 개발연대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세계와 경쟁가능한 중부경제권의 구축

- 국내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경제권을 세계도시와 바로 경쟁하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과 일자리의 연계, KTX 개통 및 수도권 전철연장,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대비 광역인프라 및 수도권 GTX 확충, 그리고 우수한 교육·문화기반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 대전 및 충남북, 강원도는 단일 생활권을 넘어 세계와 실질적으로 경쟁가능한 경제권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국토균형발전과 남부경제권 육성 필요성 대두

- 중부경제권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함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남부경제권 구축의 중심축으로 부산·울산·창원대도시권의 글로벌 기능과 중심기능을 강화하여 한반도 제2경제권인 ‘남부경제권’의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배후 영·호남지역과의 연계를 강화

2) '3+1 한반도경제권' 구축 방향

□ 기본방향

- 인구 8,000만명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경제권의 구축은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통일시대의 국토경영 전략으로 추진해야 함
- 남한을 중심으로 글로벌 광역경제권인 중부경제권 및 남부경제권과 함께 제주경제권의 '2+1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구축함
 -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 전체를 '북부경제권'으로 하는 '3+1 한반도경제권'을 형성함

□ 특화방향

- 중부경제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 ⇒ 세계속의 중부경제권 : 글로벌 허브기능 및 창조산업의 메카
- 남부경제권(영남권 + 호남권)
 - ⇒ 동북아속의 남부경제권 : 지식기반제조업 및 물류산업 중심지
- 제주경제권(제주특별자치도)
 - ⇒ 동북아의 해양관광거점 : 세계적인 관광휴양거점
- 북부경제권(북한 전역)
 - ⇒ 통일 대한민국의 북부경제권 : 자원 및 에너지산업의 중심지

3) 중부경제권 발전방향 및 구축전략

① 비전 및 목표

□ 비전 :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MCR 선두그룹으로 도약

□ 목표

- 동북아 글로벌 경제중심지(hub)
 - 국제금융, R&D본부 등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MICE 산업 육성
 - 글로벌 및 광역교통인프라 기능 향상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지식·창조경제 선도기능의 중심지
 -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으로 지식기반산업 육성
 - ※ 서울(지식기반서비스), 대전(R&D 중심지), 인천(국제물류), 경기·충청(지식기반제조), 강원(관광·휴양)으로 특화발전
 - 창조산업(문화, 콘텐츠, 한류 등)의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 21세기 한반도경제권의 형성을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② 구축전략

□ 서울대도시권 발전방향

- 국제업무·국제금융,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등 글로벌 기능이 집적된 세계적 대도시권(MCR)으로 육성
- 신성장동력(지식기반산업 및 창조산업)의 거점 육성을 통한 국가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및 광역 교통인프라 확충

□ 대전·세종 대도시권 발전방향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IT·BT 과학기술의 R&D 허브 기반 조성
-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신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첨단산업 및 녹색성장산업 거점 육성
- 세종시 등 국가중추행정 및 서울대도시권의 업무기능 분담

□ 중도시권 발전방향

- 인구규모 30~100만명의 도시권으로 천안·아산권, 원주·충주권의 2개 도시권으로 형성
- 특화기능을 바탕으로 기능적 연계와 보완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경제기반을 구축하며, 지역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천안·아산권은 기초·응용과학 R&D와 이와 연계한 원천기술개발, 원주·충주권은 첨단의료기기 생산중심으로 특화

□ 소도시권 발전방향

- 인구규모 10~30만명인 도시권으로, 7개 소도시권으로 형성(춘천·가평, 서산·당진, 포천·동두천, 보령·홍성, 강릉·평창, 동해·삼척, 속초·양양)
- 중심도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주변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의 역할과 함께 ‘자립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여 자립적 발전과 연계협력발전을 도모

4) 남부경제권 발전방향 및 구축전략

(1) 비전 및 목표

□ 비전 : 동북아 및 한반도의 연계발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남부의 글로벌 광역경제권 구축

□ 목표

- 동북아의 비즈니스 물류 허브 및 차세대 융·복합 지식기반산업 육성
 -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국제물류의 전진기지 구축
 - 국가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신기술 융·복합 성장동력 창출
- 첨단·초고속 광역 및 글로벌 교통네트워크 구축
 - 공항 및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국내외 연계 교통네트워크 구축
 - 주요 거점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
- 동북아 문화·관광 및 해양·산악휴양의 거점 조성
 - 역사, 문화, 자연 등이 융합된 동북아 관광 및 휴양의 허브 구축

(2) 구축전략

□ 부산·울산·창원 대도시권 발전방향

- 동북아 해양 비즈니스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남부경제권의 경제수도로 육성(부산: 국제물류·금융, 영상 등)
- 국가기간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선도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울산: 자동차, 조선, 창원: 기계 등)
- 남부권신공항, 광역급행철도 등 글로벌 및 광역 교통네트워크 구축

□ 대구·구미 대도시권 발전방향

-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 산업 등 글로벌 산업기능의 강화
- 교육·학술자원을 활용한 인적자원 개발 및 문화·예술인력 양성
- 대구~울산간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 광주·나주 대도시권 발전방향

- 光융합산업 등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기능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등 아시아 문화·예술의 기능 강화
- 88올림픽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 전주·익산·군산 대도시권 발전방향

- 첨단부품소재 관련 서부지역의 신성장 융·산업클러스터 조성
- 식품 및 농생명산업의 전략적 허브 구축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새만금 개발 및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 중도시권 발전방향

- 인구 30~100만명 규모로, 포항·경주, 진주·사천, 광양만권의 3개 도시권 형성
- 해당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주변 대도시권과 연계하여 남부경제권의 경제성장을 견인
- 포항·경주권은 철강산업 및 전통문화·관광, 진주·사천권은 항공·조선, 실크, 한방약초, 광양만권은 물류,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특화

□ 소도시권 발전방향

- 인구 10~30만명 규모로, 6개 도시권으로 형성(안동·영주, 상주·문경, 통영, 정읍, 남원, 목포)

- 중심도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주변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의 역할과 함께 ‘자립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여 자립적 발전과 연계협력발전을 도모

5) 제주경제권 발전방향 및 구축전략

□ 비전 :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자유도시 실현

- 수려하고 깨끗한 관광자원과 청정식품을 기반으로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이자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자유도시

□ 구축전략

-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지원하는 광역교통체계 확충
 - 제주도의 글로벌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주신공항 건설
-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청정환경과 1차 산업을 연계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전담조직 신설, 농공단지 조성 등 청정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주민과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 미래도시 건설
 -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추진 및 카본프리(Carbon-Free) 지역 조성

기 획 · 집 필 · 편 집

홍 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 원장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이원섭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이원빈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장성화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김종선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신두섭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조상운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한경원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